

Online Series

2023. 08. 04. | CO 23-19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의의와 북한의 인식

김민성(국제전략연구실 부연구위원)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출범은 대북 억제에 대한 양국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하는 계기이자 한반도 '맞춤형 확장억제(tailored extended deterrence)'의 진화를 가시적으로 보여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NCG와 관련한 북한의 민감한 반응은 한미의 이러한 행보가 실질적 이행 가능성이 크고, 북한이 '전략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특히 북한은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수준, 일체형 확장억제에서의 한국의 역할 확대 및 능력 배양 가능성, NCG와 한-미-일 안보협력과의 연계 가능성 그리고 미국의 관여 의지의 지속 여부에 관심을 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대미외교를 통해 확장억제의 공고화와 더불어 동맹의 역할 및 연대의 가치를 강조하고, NCG의 효과적인 가동을 위한 신속한 제도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의 대북정책인 담대한 구상 추진을 위한 섬세한 전략을 마련하고, 국제사회 및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북핵외교 역시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미 핵협의그룹(NCG) 출범 회의의 의의

2023년 7월 18일 서울에서 한미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 NCG)의 출범 회의가 개최되었다. NCG는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워싱턴 선언」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첫 회의는 한국 정부에서 주재했다. 양국은 1953년 상호방위조약(Mutual Defense Treaty) 체결 이후 70년간 동맹체제의 근간이자 목표로 '대북 억제'를

상정해왔으며, 「워싱턴 선언」에서 이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바 있다. 향후 양국은 NCG를 통해서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로 인해 변화하는 한반도 정세에 대응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위해 협력하며 다양한 실행 조치를 구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동 회의의 의의는 크게 의지, 형식, 내용 면에서 평가할 수 있다. 우선 양국은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NCG가 연합 억제 및 대응 태세를 강화하는 메커니즘으로서 지속적으로 운영될 것임을 발표했다. 특히 “미국의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역량에 의해 뒷받침되는 확장 억제를 한국에 제공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함으로써 미국의 능력이 대북 억제에 있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될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북한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¹⁾을 언급하였는데, ‘정권의 종말’이라는 표현이 한미 간 공동의 입장으로 다시 채택됨으로써 한국의 결연한 대북 대응 의지 역시 확인할 수 있었다.²⁾ 이처럼 양국은 북한의 고도화된 핵능력과 핵사용 가능성에 대해 강력한 공동 대응을 명시함으로써 그 의지를 부각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양국은 “한반도 주변 미국 전략자산 배치의 가시성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발표하며,³⁾ 당일 전략핵잠수함(Ship, Submersible, Ballistic-missile, Nuclear: SSBN) 켄터키함(SSBN-737)의 부산작전기지 입항이 공개되기도 했다. 이러한 합의와 행보는 향후 한반도 상황에 따라 미국 핵3축(대륙간탄도미사일(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ICBM), 잠수함탄도미사일(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 SLBM), 전략폭격기)의 전략자산이 다양한 규모와 형태, 즉 개별 또는 육·해·공군 전력과의 조합 등으로 전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북한의 도발 횟수와 수준에 따라 순환에서 상시 배치에 가까운 전개 가능성도 가늠하게 한다. 이러한 전략자산의 가시성 확보는 군사전략적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신호(signal)이자 한국에 대한 안전보장의 신뢰성(security assurance)을 높이는 효과를 동시에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형식에서도 동 회의에 대한 양국의 높은 관심을 엿볼 수 있다. 이번 회의는 한측의 국가안보실과 미측 국가안전보장회의(National Security Council: NSC) 소속 인사들을 비롯하여 양국의 국방부, 외교부와 군사 당국 관계자들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는 확장억제 사안이 양국 간 군사적 차원 외에 외교·안보 차원에서도 그 중요성이 확대하고 있음을 보여준

1) 대한민국 대통령실, “한미 핵협의그룹(NCG) 공동언론발표문,” 2023.7.18., <<https://www.president.go.kr/newsroom/press/emxyMDyK>> (검색일: 2023.7.19.).

2) 트럼프-바이든 행정부의 핵태세검토보고서(NPR)에서 언급되었던 핵 사용 시 “김정은 정권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는 표현은 양국 차원에서는 2022년 11월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ROK-US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SCM) 공동선언에서 처음으로 명시된 바 있다.

3) “한미 핵협의그룹(NCG) 공동언론발표문,” 2023.07.18.

다. 무엇보다 양국은 합의된 내용의 조속한 추진과 진전 사항에 대해 몇 개월 내에 양국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로 합의하고, 분기별 개최와 연말 미국에서 NCG 추가 고위급 회의 개최 계획도 발표했다. 이는 동 회의가 실무급에서 고위급 수준까지 긴밀한 협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강조한 것으로, NCG의 정례화와 공고한 제도화를 지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내용 면에서 양국은 “미국의 핵 작전에 대한 한국의 비핵 지원의 공동기획과 실행”을 비롯하여 “핵 및 전략기획과 북한의 공격에 대한 대응 관련” 논의를 언급했다. 또한, “△보안 및 정보공유 절차 개발,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 및 소통 체계, △관련 기획, 작전, 연습, 시뮬레이션, 훈련 및 투자 활동에 대한 협력 및 개발 등 한반도 상 핵 억제 및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업무체계 확립”을 발표했다.⁴⁾ 발표문 상에서 제한적으로 언급했지만, 기본적으로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해 ‘정보공유-소통 체계-실질적 훈련체계 확립’이라는 군사적 차원의 핵심 틀을 갖추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워싱턴 선언」에서 언급되었던 한국의 전략사령부(2024년 창설 목표)와 한미연합사령부 간의 역량 및 기획 활동, 미 전략사령부와 의 도상훈련도 보다 구체화 될 것으로 보인다. 합의된 항목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 협의와 이행이 충실히 이루어진다면, NCG는 높은 수준의 확장억제를 실질적으로 이끌어내는 메커니즘으로서 그 발전 가능성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종합적으로 NCG 출범은 한반도 ‘맞춤형 확장억제(tailored extended deterrence)’가 진화하고 있음을 가시적으로 보여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물론 한미 NCG 가동의 의미와 효과성에 있어서 여전히 국내적으로 다양한 문제 제기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대표적으로 나토의 핵기획그룹(Nuclear Planning Group: NPG)과 내용 및 운용 측면을 비교했을 때, 협력의 수준이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나토 NPG가 1966년 설립 이후 지나온 역사만큼, 향후 NCG의 발전에 있어 여러 시사점을 줄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미 NCG와 나토 NPG가 형식과 내용 측면에서 차이가 있고, 궁극적으로 상이한 위협에 대한 대응인 만큼 그 효과성을 비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워싱턴 선언」에서 핵확산금지조약(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NPT)을 준수한다는 언급에 따라 핵무장 가능성이라는 선택지를 우리 스스로 포기했다는 비판이 있다. 그러나 NPT 제10조 1항은 “각 당사국은, 당사국의 주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본 조약상의 문제에 관련되는 비상사태가 자국의 지상이익을 위태롭게 하고 있음(jeopardized the supreme interests of its country)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본 조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4) 위의 자료

권리(the right to withdraw from the Treaty)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⁵⁾ 즉 지상 이익이 위협받을 때 탈퇴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있어, 이러한 비판 역시 근거가 약하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북한의 비핵화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는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확장억제의 강화가 현실적인 선택지이자, NCG의 가동은 이를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으로서 최선의 대안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기되는 효과성에 대한 의문과 국민의 신뢰는 정부가 미국과 합의한 내용을 구체화하고 속도감 있게 이행해 나감으로써 증명해 보이는 것이 가장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북한의 인식과 전망

북한은 한미 NCG 출범 회의 전후로 여러 담화를 발표하며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고, 연이은 미사일 시험 발사를 통해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북한은 7월 17일 김여정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명의의 담화를 통해 “비핵화라는 말은 실로 고어사전에서나 찾아보아야 하는 현실에서 통하지 않을 소리”라며, 양국 간의 확장억제 및 군사동맹 강화는 북한과의 협상에서 멀어지는 길임을 언급했다.⁶⁾ 19일에는 순안 일대에서 동해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22일에는 순항미사일, 24일과 25일에도 평양 일대에서 동해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⁷⁾ 실시간 연쇄 대응에 가까운 반응을 보였다. 7월 27일 한국전쟁 정전협정일에도 강순남 국방상이 열병식 연설을 통해 “이제는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이 일어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언제 어떻게 핵전쟁을 일으키겠는가 하는 것이 문제”라고 위협하며 NCG를 “핵전쟁 기구”로 언급하기도 했다.⁸⁾

이러한 민감한 반응은 한미 NCG에 대한 북한의 인식을 잘 드러낸다. 기본적으로 북한은 한미 확장억제의 강화가 선언적 차원이 아닌 실질적으로 이행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이러한 전개가 북한에게 ‘전략적 손실’을 가져올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NCG 관련 북한의 관심 사항과 예상 반응을 전망해 보는 것은 향후 확장억제의 구체화 과정뿐 아니라 한미 양국의 대북 정책 전반에 있어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5) United Nations Office for Disarmament Affairs,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NPT),” <<https://disarmament.unoda.org/wmd/nuclear/npt/text>> (Accessed July 20, 2023).

6) 김여정 부부장 담화, “우리는 밀지는 일은 하지 않는다,” 『조선중앙통신』, 2023.7.17.

7) “올해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일지,” 『동아일보』 이미지, 2023.7.25., <<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3/07/25/120398449.2.jpg>> (검색일:2023.7.26.).

8) 『조선중앙통신』 보도, 2023.7.28.

첫째, 북한은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가 매우 불편하다. 미국이 한반도에 전략자산을 전개하는 것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최고 수준의 위협’으로 상정될 수 있다. 일례로 최근 전략핵잠수함의 부산 기항에 대해서 국방상 강순남 명의의 담화를 통해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에 부합한다고 언급한 것만으로도 북한의 인식을 엿볼 수 있다.⁹⁾ 이러한 북한의 위협인식 수준은 과거 전략자산 전개를 동원한 한미 연합훈련 시, 북한군의 작전 태세가 ‘준전시’ 상태나 ‘전투 동원 태세’ 등으로 발령되었던 사례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¹⁰⁾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이나 전략자산 전개를 통해 반미 인식을 확대하여 대내 결속이나 통제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부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러한 전략자산 전개가 정례화되거나 수시로 전개되는 것은 북한으로서는 대내적으로 상시 긴장감을 늦출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높은 수준의 긴장은 군부대는 물론, 동원되는 주민들의 경제활동이나 일상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국가 전체가 경각심을 상시 탑재해야 하는 상태가 된다. 또한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주민의 지속적인 경계심과 이로 인한 피로의 누적은 정권에 대한 불만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시 한국 및 일본과의 연합훈련 등 유기적인 협력과 이를 통해 동맹 네트워크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어 북한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북한은 한미 NCG의 활동이 정권의 대내외 환경을 관리하는데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NCG에 대한 공세적인 대응도 염두에 둘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북한은 NCG를 통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의 수준, 특히 그 과정에서 핵무기 체계와 관련한 경험이 없는 한국의 능력과 역할이 어느 수준과 범위까지 배양되고 확대될 것인가에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작전, 연습, 시뮬레이션, 훈련과 관련하여 양국이 어떠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훈련을 진행할 것인지에 관심을 둘 수 있다. 특히 한미 양국이 급변사태를 포함한 정권의 안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다 공세적인 수준에서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도상훈련 등을 진행한다면, 북한으로서는 그 의도와 실현 가능성을 타진하며 다시 한번 경각심을 높여야 할 수밖에 없다. 결국 북한은 이러한 과정을 주시하면서 NCG를 통한 한국의 확대되는 역할이나 미국과의 핵과 관련한 긴밀한 협력을 북한의 핵개발-보유-사용의 정당성으로 삼을 뿐 아니라 도발의 명분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강순남 국방상 담화”, 『조선중앙통신』, 2023.7.20.

10) 정성윤,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행태,”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23-15, 2023.4. 21.), p. 2, <https://www.kinu.or.kr/main/module/report/view.do?idx=114273&nav_code=mail674786581> (검색일: 2023.7.23.).

셋째, 북한은 NCG의 합의 내용의 구체화뿐 아니라 향후 ‘추가’되는 사항에 대해 고민할 것이다. 특히 한미가 NCG를 양자 협의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북한은 여전히 NCG와 한·미·일 안보협력과의 연계에 대해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일 3국이 연내 미사일 정보공유 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합의한 만큼, 한미 양국이 일본과의 협력의 범위와 수준 그리고 일본의 역할 등에 예의 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8월 18일로 예정된 미 캠프데이비드에서의 한·미·일 3국 정상회담 전후로도 공세적 비방이나 도발 등이 수반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북한은 3국과 개별 대화에 나섬으로써 동맹국 3국 관계의 이간을 도모할 수 있다. 일례로 북한은 최근의 보도되는 북일 간 접촉이나, 공동경비구역(Joint Security Area: JSA)을 통해 월북한 미군 병사의 귀환과 관련하여 북미 대화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은 확장억제의 실효성 평가에 있어 미국의 의지를 계속해서 시험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2022년부터 전례 없는 빈도의 저-고강도 미사일 도발을 감행해오고 있으며, 사용하는 투발 수단의 종류와 방식도 다양하게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행위는 자국의 핵능력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표출하고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우위를 점함과 동시에 한국 및 한미 연합 대응의 한계를 노정하여 궁극적으로 ‘무력화’ 시키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북한이 잦은 도발을 통해 확장억제 체제를 무력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비대칭 능력을 계속해서 선보임으로써 충격의 강도를 높여 나가야 하는데, 최근에는 역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듯하다. 잦은 도발로 인해 한미 양국은 NCG를 포함한 확장억제 메커니즘 강화와 한·미·일 안보협력도 공고해지고 있다. 북한은 전술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투발 수단들을 지속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핵공격의 가시성을 높이려고 하는데, 대부분의 제원이 파악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높은 수준의 임팩트를 주고 있다고 평가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정치적 효과와 그 상징성을 감안하면,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시도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그러나 동시에 핵실험의 상징성은 북한을 암묵적으로 지원하는 중국과 러시아에게 부담스러운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고, 국제사회의 압박은 보다 거세질 수 있으며, 한미 확장억제 및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정책적 고려사항

우리 정부는 한국이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의 수혜자로서 이러한 질서의 유지가 우리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며, 국제사회에서의 국제법과 규범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해 오

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핵 문제를 비확산체제(NPT)의 틀 내에서 주요 도전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평가하고, 대응 방안으로 확장억제의 강화를 전략적 선택지로써 강조해 왔다. NCG는 선언적 차원을 넘어 실질적 확장억제 메커니즘을 가동한다는 의미가 있는 만큼, 향후 주요 과제로 다음 사항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정부는 미국에게 북한의 핵문제가 미국의 핵·비확산 정책뿐 아니라 인도-태평양전략을 포함한 주요 외교안보전략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음을 지속적으로 상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 역시 이번 NCG를 통해 기존의 핵관련 운용 사례에서 벗어난 새로운 접근을 가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전략자산 전개를 비롯한 NCG 합의 내용의 이행이 관건이다. 이는 한미동맹의 상호 신뢰 수준뿐 아니라 미국의 북핵 문제에 대한 관심과 관여를 평가하는 주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높은 수준의 미국의 관여는 한국에게 안보 신뢰도를 높이면서 동맹의 공고화에 기여할 것이다. 나아가 미국이 구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 및 국제질서 재편에 있어서 한국의 적극적 협력을 가능하게 하고, 협력의 과정에서 동맹의 역할과 연대의 가치를 제고하게 할 것이다. 2023년 7월 27일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이하여 한미뿐 아니라 영국, 캐나다 등 유엔 참전국에서 기념식이 열렸고, 같은 날 저녁 북한은 ‘전승절’이란 이름으로 열병식을 통해 러시아 및 중국과의 밀착 행보를 과시했다. 정부는 미중 전략경쟁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한반도 상황이 직간접적인 변수가 되고 있다는 점과 이 역시 미국의 국익과 연결되는 부분임을 설명함으로써 동 사안을 미국의 정책 우선순위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양국은 합의한 NCG의 정례화·구체화뿐 아니라 신속한 제도화에 중점을 두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양국 간 정례적으로 만나 협의함으로써 구체적인 조치를 논의·추가해 나가고, 이행까지 모니터링해 나가는 과정은 NCG의 실효성을 평가하는 데 기본 척도가 될 것이다. 특히 NCG가 장기적 확장억제 메커니즘으로 운영될 것임을 감안하면, 신속한 제도화는 필수이고 한국의 실질적 참여 확대가 반영된 작전계획화 단계까지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과정은 양국 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큰 틀에서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가까이는 2024년 11월로 예정된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관련한 다양한 사안에 대해 우리 정부가 대응 방안의 선제적 마련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 양국 간 이견이 표출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NCG 제도 내에서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하고 합의를 도출, 이행하는 방안을 논의해 볼 수 있다.

셋째, NCG가 추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긴밀한 ‘소통’이 필수이다. 한미 양국은 고위

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 EDSCG) 등 기존의 확장억제 관련 메커니즘과 NCG 간의 유기적 운영을 위해 원활한 소통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양국은 군사적 도발의 확전 시 핵과 관련한 대응이 긴급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을 고려하여 상시 소통이 가능한 체계 역시 공고하게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소통은 양국 내의 부처 간의 협업과 조율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한국 정부에서는 상황 발생 시 국가안보실-통일-외교-안보 부처 등 관계 기관 간의 긴밀한 협의와 조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존 체계의 보완 및 신설도 검토해볼 수 있다.

넷째, 정부는 NCG 추동을 포함하여 한미 확장억제 강화가 결국 정부의 대북 정책의 목표인 북한 비핵화에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북한은 국내외적으로 핵보유국임을 천명해 왔는데, 작년부터는 핵의 선제사용 가능성까지 제기해오고 있다. 또한 북한 국내적으로는 자력갱생에 매진하고 통제를 강화해 나가면서 정치·경제·사회적 안정을 목표로 상황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행보 속에서 정부는 ‘담대한 구상’의 3D(억제, 단념, 대화·외교)를 통한 여건 조성에서 장기적인 접근을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 대북 정책의 방향성을 공고히 하고, 추진력의 지속과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섬세한 전략을 계속해서 발굴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섯째, 정부는 대주변국 북핵 외교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한국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제 비확산 체제(NPT)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 및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을 비롯한 지역협의체를 통해서도 역내 안보 환경을 위해 확장억제 강화의 필요성과 북핵 문제의 진전이 중요한 조건임을 강조해야 한다. 중국에게도 NCG의 가동이 대북 억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이는 한반도 및 지역의 안정 목표라는 점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한미 양국은 「워싱턴 선언」에서 NCG를 통한 확장억제를 추진하면서도 한반도의 비핵화 달성이란 궁극적 목표를 위해 전제조건 없는 대화와 외교에 대한 의지 역시 강조한 바 있다.¹¹⁾ 이러한 부분 역시 북한에 대해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발신해야 할 것이다. ©KINU 2023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통일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11) 대한민국 대통령실, “워싱턴 선언,” 2023.7.18., <<https://www.president.go.kr/newsroom/press/C8pBYSLx>> (검색일: 2023.7.20.).